

# EU Brief

| 월간 EU 동향 |

- EU 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재정적자 확대
-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유럽의 고민
- 국제수지 적자 누적은 투자위축과 보호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
- 은행산업: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구조조정 가능성
- 리스본 전략 완료 이후의 유럽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http://www.yonseri.org)

Yonsei-SERI EU Centre

	<b>EU Economy</b>	
	EU 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재정적자 확대 Increasing fiscal deficit threatens EU economic recovery	002
	빚더미에 오른 EU 각국 EU countries suffering from huge debt	004
	<b>EU Politics</b>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유럽의 고민 Concerns over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have finally come	006
	EU 의장국이 된 스웨덴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스웨덴의 부담 Expectations for new chair country of Sweden and its burdens	008
	<b>Trade Issues</b>	
	국제수지 적자 누적은 투자위축과 보호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 Possibility of sluggish investment and widespread protectionism from accumulated balance of payment deficit	010
	<b>Industry Trends</b>	
	은행산업: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구조조정 가능성 Banking Industry: possibility of restructuring after stress test	014
	엔지니어링 산업: 녹색산업에서 활로를 모색 Engineering Industry: finding way out of Green Industry	017
	<b>EU Law</b>	
	리스본 전략 완료 이후의 유럽 Europe after Lisbon Strategy	019
	<b>Social Issues</b>	
	국경 없는 콘텐츠, 국경 없는 시청각 산업 Audiovisual industry without borders	022
	<b>Report Review</b>	
	중국의 對유럽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 Insignificant level of Chinese direct investment in Europe	025
	유럽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 EU firms actively react against climate changes	026
	<b>EU Centre news</b>	
	국회 「브뤼셀포럼」 발족 Parliament inaugurates Brussels Forum	028
	EU 학생 방문 프로그램 후기 A note from EU visiting student	028



# EU 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재정적자 확대

글로벌 경제에 공공부채와 재정적자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각 경제전망 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재정지출의 확대에 의해 주요 국가들이 자금조달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EU 경제 역시도 대규모 부채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이 거시경제 기초를 취약하게 만들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확대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안정의 바탕이 되어왔던 유럽 사회보장제도의 근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2009~2010년간 EU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의 기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2009년 EU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72.6%, 유로존은 77.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8.0%, 12.1%씩 증가한 규모이다.

★ EU 및 유로존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EU27	58.7	61.5	72.6	79.4
유로존16	66.0	69.3	77.7	83.8

자료: Eurostat

EU의 공공부채 급증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 투입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에 투입된 금액은 총 3조 7,700억 유로이다.<sup>2</sup> 구제금융 투입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2조 9,200억 유로는 은행부채 보증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 간 대출회복을 통한 유동성 보강에 5,056억 유로, 자본 투입을 통한 직접 유동성 지원에 3,114억 유로, 부실 자산 구제에 330억 유로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채 증가에 따라 EU의 재정적자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2008년 GDP 대비 2.3%에서 2009년 6.0%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 다시 7.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의 경우도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의 5.3% 수준에서 2010년에는 6.5%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재정적자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EU 경제에 이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와 맞물려 재정 건전성 문제가 더욱 불거지면서 경제회복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치달은 것이다.

★ EU 및 유로존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EU27	-0.8	-2.3	-6.0	-7.3
유로존16	-0.6	-1.9	-5.3	-6.5

자료: Eurostat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6월 19일 EU 회원국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정례회의를 마친 후, 재정구조 개선과 적절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로 지역이 경기회복 효과를 보려면 내년부터 재정적자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쓰지 말 것과 세금 환수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EU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현 상황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재정을 메우고 세수를 늘려야 하지만 금융위기로 어려운 경제 현실에 세입을 증가시킬 수도, 세출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는 정치적 현실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금 인상은 재정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다. 이미 영국은 부유층 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주류세와 담뱃세를 2%p 올렸으며, 자동차 소비세도 인상하기로 했다. 독일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47.5%로 상향했으며, 그리스는 연 소득 6만 유로 이상 계층에 대한 한시적 세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등 EU 각국에서는 세금인상을 통해 세수를 늘리려는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세금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조세저항 등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일부 국가는 세금 인상 계획을 내놓은 뒤 국민과 기업의 반발을 사며 지지도가 추락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정부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업률이 치솟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을 축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거리시위 등 사회보장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9월과 2010년에 총선을 앞둔 독일과 영국 정부, 역시 2010년에 선거가 줄을 잇는 동유럽 국가들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다.

민간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국채발행의 급증도 역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채권시장의 초과공급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를 억제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sup>3</sup>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EU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 정부들도 국채 이자율 상승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년 만기 미국채 이자율은 2008년 연 2.0%에서 최근 3.5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독일 정부의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2.93%에서 3.57%로 영국은 3.41%에서 3.78%로 상승했다.

실물경기 지표들이 약세를 거듭하고 있는 EU 경제는 본격적인 경제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늘어난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오히려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 재정지출의 증대가 공공재를 과도하게 생산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초래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구축효과 발생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up>1</sup> EU 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예산 및 재정 부문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서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 공공부채는 6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규정

<sup>2</sup> 각국별 구제금융은 영국 7,812억 유로, 덴마크 5,939억 유로, 독일 5,542억 유로, 아일랜드 3,845억 유로, 프랑스 3,501억 유로, 벨기에 2,645억 유로

<sup>3</sup> 정부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면 자금량이 감소한다. 즉 시중자금이 메마르면 이자율이 상승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된다. 이와 같이 팽창적인 재정정책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정부 지출의 효력을 상쇄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 빚더미에 오른 EU 각국

유럽 각국이 재정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 점차 확대되어 EU의 상한규정인 3%에 위배되는 국가들의 수가 전체 27개국 중 21개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EU 27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단위 : %)

지역분류	EU	2007	2008	2009	2010
유로 16개국	오스트리아	-0.5	-0.4	-4.2	-5.3
	벨기에	-0.2	-1.2	-4.5	-6.1
	핀란드	5.2	4.2	-0.8	-2.9
	프랑스	-2.7	-3.4	-6.6	-7
	독일	-0.2	-0.1	-3.9	-5.9
	아일랜드	0.2	-7.1	-12	-15.6
	이탈리아	-1.5	-2.7	-4.5	-4.8
	룩셈부르크	3.6	2.6	-1.5	-2.8
	네덜란드	0.3	1	-3.4	-6.1
	포르투갈	-2.6	-2.6	-6.5	-6.7
	스페인	2.2	-3.8	-8.6	-9.8
	그리스	-3.6	-5	-5.1	-5.7
	슬로베니아	0.5	-0.9	-5.5	-6.5
	키프로스	3.4	0.9	-1.9	-2.6
	몰타	-2.2	-4.7	-3.6	-3.2
동유럽	슬로바키아	-1.9	-2.2	-4.7	-5.4
	불가리아	0.1	1.5	-0.5	-0.3
	체코	-0.6	-1.5	-4.3	-4.9
	에스토니아	2.7	-3	-3	-3.9
	헝가리	-4.9	-3.4	-3.4	-3.9
	라트비아	-0.4	-4	-11.1	-13.6
	리투아니아	-1	-3.2	-5.4	-8
	폴란드	-1.9	-3.9	-6.6	-7.3
북유럽	루마니아	-2.5	-5.4	-5.1	-5.6
	덴마크	4.5	3.6	-1.5	-3.9
영국	스웨덴	3.8	2.5	-2.6	-3.9
	영국	-2.7	-5.5	-11.5	-13.8

자료: Eurostat

유로존의 16개국 가운데 13개국은 재정적자를 GDP의 3%선을 초과해 운영할 계획이다. 13개 국가에는 유로존 내 경제대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9%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에는 5.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

운데 향후 4년간의 세수 부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의회에서 요구됐던 세제 인하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한편, 정부 부채는 향후 5년간 3,1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부양책이 지난 수년간 지속된 재정지출 억제 노력을 무위로 돌린 양상이다.

프랑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실업률이 2009년

9.6%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조세수입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단시일 안에 재정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2009년 GDP 대비 6.6%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퇴직연령을 높이려 시도했지만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이를 중단하고 말았다. 이는 거리시위를 비롯해 사르코지 대통령의 사회보장 개혁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영국은 2009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1.5%, 공공부채가 68.4%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은행 구제금융, 세수 감소,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정부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인데, 주로 은행권 구제금융 지원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향후 은행의 부실자산 증가로 인해 자본 확충 등 구제금융 투입이 추가로 예상되므로 정부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동유럽은 서유럽 지역과 달리 경기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고 정부지출은 증가했기 때문인데, 불가리아를 제외한 모든 동유럽 국가들의 2009년 재정적자 비중이 3%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라트비아에 대해 EDP(Excessive Deficit Procedure)<sup>5</sup>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고한데 이어 최근에는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폴란드를 대상으로 조기

경보 조치를 취했다. 특히 유로존 가입을 위해 환율 안정에 만전을 기했던 폴란드로서는 새롭게 대두된 재정적자 축소 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sup>6</sup> 폴란드는 2009년 7월로 설정한 'ERM II(유럽 환율체제)'<sup>7</sup> 가입 목표를 계속 유지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동유럽 지역은 라트비아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의 금융불안으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이자비용 부담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유로화 표시 국채 유통수익률은 신용위기 직후의 상황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sup>8</sup>

종합적으로, 서유럽 경제 전반은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증가가 향후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경기부양책을 위한 재정적자가 오히려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형국이다. 한편, 동유럽 경제는 정부의 세입 감소,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축소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실업률 증가 등이 정치적 부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구나 2009~2010년에는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즉, 해외자본 이탈 가능성, 높은 외채 비중 등 대외여건 악화와 거시경제 취약성이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up>4</sup> 은행권 구제금융으로 6,165억파운드를 투입했으며 경기부양책에서 시행되는 세금 감면으로 2008~2009년에는 68억 파운드의 세수가 감소 (김득갑 (2009) "영국경제의 불안요인과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sup>5</sup> 회원국들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조사를 통해 조기경보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범칙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

<sup>6</sup> 최근 피치(Fitch)는 동유럽 국가 중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3개국이 오는 2013년 가장 먼저 유로존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

<sup>7</sup> 유로존 가입 기준 중 하나로 자국통화와 유로화의 환율을 변동허용폭(±15%) 이내에서 최소 2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건

<sup>8</sup> 신세웅(2009), "동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현황 및 정책과제", 국제금융센터.





#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유럽의 고민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재임 문제를 놓고 유럽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바로소는 차기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자신의 재임을 위해 캠페인 중이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직은 5년 임기로 회원국 정부에 의해 임명된 후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교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소

바로소는 전 포르투갈 총리 출신으로 2004년 27개국을 이끄는 EU 행정기구의 수장이 되었다. 1974년 포르투갈 혁명 이후 당 활동을 시작한 바로소는 법학, 경제학, 사회과학을 공부하였다. 1980년 사회민주당 당원이 되었고 외무상을 거쳐 총리로 등극하기까지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의 요직을 지냈다. 바로소는 또한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였고 부시-블레어 대서양 동맹 정상회담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2004년 바로소의 집행위원회 위원장직 후보 임명을 지지하였다.

바로소가 집행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유럽 헌법 비준은 실패로 끝났지만 EU는 27개국으로 늘어났다. EU의 주요 의제인 '확대 및 심화(widening and deepening)'를 논할 때 바로소의 외교능력을 그 성공요인으로 자주 거론하곤 한다. 따라서 바로소의 외교 능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바로소의 재임을 두고 많은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지를 보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바로소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역시 바로소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7

월부터 의장국 직위를 수행하는 스웨덴의 총리 프레드릭 레인펠트(Fredrik Reinfeldt)는 바로소에 대해 EU를 이끈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한 바 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역시 바로소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 결국 바로소는 초기 경쟁자로 거론된 프랑수아 필리옹(François Fillion) 프랑스 총리를 제치고 2009년 6월 19일 유럽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차기 집행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

하지만 바로소를 비판하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다. 그에 대한 비판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바로소가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사회적 요구보다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우고 있다는 점도 비난 요인이 되었다. 바로소 역시 자신을 개혁주의자로 일컬을 정도로 그는 자유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가 바로소의 실정으로 평가받을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은 아니다. 크고 작은 실수가 있긴 했지만 대체로 바로소의 통치 능력은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로소가 이번 재임에 성공하게 되면 지금까지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진해온 각종 시장개혁정책들이 동일한 기조하에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유럽 경제의 성장력 확충을 위한 개혁 작업들이 새로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유럽의회의 반대세력을 잠재워야 재임에 성공

바로소가 다시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려면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EU 거버넌스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바로소의 재임에 대한 최종 승인이 유럽의회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도 이러한 추세를 입증해준다. 공식 임명 절차에 따르면 집행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유럽의회의 승인은 비밀투표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유럽의회가 지난 6월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유럽의회의 정당 세력 구도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바로소가 위원장이 되었던 2004년과는 또 다른 상황으로 바로소로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형국이다. 다행히 바로소의 재임을 지지하는 중도우파 세력이 유럽의회 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회 중도우파인 국민당그룹(The European Peoples Party)의 보수세력들은 바로소의 재임에 그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바로소가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직 재임을 최종 결심한 것도 유럽의회 선거가 끝나고 난 직후였다. 외신들은 바로소가 무난히 재임을 승인받게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바로소 역시 유럽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자신이 다음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에 재임에 대한 확신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소가 재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재임을 벌써 확신하는 것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꼴이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가 중도우파의 승리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전체 투표 수에서는 중도우파의 지지만으로는 바로소가 재임에 성공할 수 없다.

현재 바로소의 재임후보에 대해 녹색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으며 외신들은 녹색당의 영향력 증대에 주

목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의 반대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럽의회가 바로소의 재임을 승인하지 않고 유럽의회 내 사회주의 세력이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울 것인지, 그럴 경우 바로소에 견줄 만한 후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편 이번 사회주의 세력의 행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회주의정당은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가이 페어호프슈타트(Guy Verhofstat)를 입후보시킬 계획을 밝혔는데, 흥미롭게도 페어호프슈타트는 전 벨기에 총리 출신으로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자이다. 사회주의세력이 자유주의자인 페어호프슈타트를 집행위원회 위원장직에 입후보로 내세운다는 것은 중도우파에 맞서기 위해서는 세력 내 정파를 넘어서서 세력 간 연합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현재 유럽의회 내 사회주의세력의 권력기반이 약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현재 자유민주세력, 녹색당, 사회주의세력, 극좌파 다수가 모두 바로소의 재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는 바로소가 특정 정치 세력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녹색당과 흠어진 좌파 세력들로부터 상당수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번 7월에 있을 바로소 재임에 대한 유럽의회 결정을 통해 향후 EU 집행위원회가 정파 간 갈등을 뛰어넘어 초국가적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EU 의장국이 된 스웨덴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스웨덴의 부담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 직위가 체코에서 7월 1일부로 스웨덴으로 넘어갔다. 스웨덴은 앞으로 6개월 동안 EU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EU의 주요 의제들을 다루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 EU 이사회 의장국은 회원국들이 회원국명의 알파벳 순서대로 돌아가며 6개월씩 맡고 있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장국을 맡게 된 스웨덴은 금융위기와 같은 이월된 현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이슈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

현재 유럽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경제위기 극복이다. 스웨덴 총리 프레드릭 레인펠트는 최근 언론에서 EU가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스웨덴 총리가 생각하는 금융위기 극복 방안의 우선 과제는 금융지원책으로 인한 공공부채 증가를 방지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레인펠트 총리는 향후 6개월간 유럽이 금융위기에서 아직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회원국들에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위기가 끝난 후 개별 국가의 공공재정을 회복시키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생각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조치 마련 역시 스웨덴이 앞으로 6개월간 주도해나가야 하는 핵심 과제이다. 현재 EU 회원국 리더들은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다가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EU가 협의 중인 금

융규제에 대한 안건, 터키를 포함하는 EU 확대 문제, 가스 등 에너지 문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등도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우라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이란과의 협상도 추진해야 하고, 올 10월에 있을 리스본 조약에 대한 아일랜드의 국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스웨덴은 의장국으로서 리스본 조약을 내년 1월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체코의 의장국 수행성과는 다소 미흡

지난 6개월간 EU 의장국직을 수행한 체코에 대한 평가는 싸늘하다. 체코가 주관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의장국 수행 내용은 거친 파도에 휘말린 한 척의 작은 배로 표현되곤 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중요한 주요 이슈들이 끊임없이 펼쳐졌고, 이에 대한 체코의 대응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라는 난제가 체코라는 작은 배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의장국직을 수행한 체코 정치 관료들도 문제가 있다. 체코 총리 미레크 토폴라네크(Mirek Topolanek)는 체코의 의장직 수행에 대해 시간낭비였다고 폄하했다. 체코 대통령 바츨라프 클라우스(Vaclav Klaus) 역시 EU 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은 EU의 관리체제를 옛 소비에트 연방에 비유하는 등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자로도 유명하며, 개정된 리스본 조약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리스본 조약의 체코 국내 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많은 유럽 외교관들은 지난 6개월간의 체코 의장국직 수행을 ‘파행적’이었다고 표현한다.

이제 EU의 주요 의제를 다룰 임무는 스웨덴에게

넘어갔다. 현재 유럽 이사회 주요 인사들은 스웨덴의 의장국직 수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만큼 스웨덴의 어깨가 무거운데 스웨덴은 작은 인구의 나라이자 전체 유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자국의 조건들이 27개국이 탄 배를 운항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까봐 염려하고 있다. 향후 6개월 동안 펼쳐질 난항을 앞두고 스웨덴 총리 레인펠트는 “올 가을의 난제들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애쓸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 스웨덴의 임무를 담은 스톡홀름 프로그램

스웨덴은 앞으로 책임져야 할 주요 임무를 담은 스톡홀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스웨덴이 의장국으로서 책임져야 할 또 다른 난제로 내무·사법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EU 협력 개발 및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는 국제범죄와의 전쟁을 더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발틱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EU와 인접한 이웃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지속하고 EU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EU가 개발,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등 글로벌 이슈를 주관하는 주축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장국의 직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스웨덴은 한-EU FTA 체결을 우선 과제로 생각

스웨덴은 정치적 과도기 속에서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의사봉을 책임질 예정이다. 특히 한-EU FTA 체결을 앞둔 한국정부로서는 스웨덴의 우선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관심사이다. 지난 23일 스웨덴이 발표한 ‘의장국 최우선 현안 보고서’에서도 스웨덴은 현재 EU가 진행 중인 FTA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는 관세환급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지난 6월에 치른 유럽의회 선거 및 EU 집행위원회의 재편 문제와 겹쳐 FTA 주요 사안에 대한 EU 측 의견이 아직 완전히 조율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EU FTA는 올 가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7월 7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에서 EU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스웨덴은 의장국 수행 일정에서 최우선 현안 과제로 한-EU FTA와 같이 가시권에 가장 근접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국제수지 적자 누적은 투자위축과 보호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

## 2009년 1/4분기

### 477억 유로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

EU의 2009년 1/4분기 무역수지가 477억 유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sup>1</sup> 2008년 같은 기간에 632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이나, 이는 수출 감소폭보다는 수입 감소폭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즉, 수입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체 교역량이 줄어든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580억 유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화학제품과 기계류는 각각 171억 유로, 204억 유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반영되어 주요국들과의 무역량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전년동기 대비). 제1 교역국인 미국과는 2008년 1/4분기에 1,085억 유로 규모의 무역량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09년 같은 기간에는 13.2%가 감소한 942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 밖에 러시아, 터키, 한국과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8.1%, 32.7%, 23.4%씩 감소했다.

### ★ 상품별 EU의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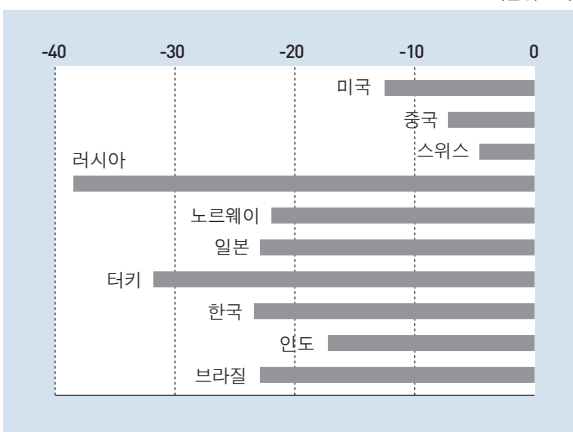
(단위: 억 유로)

품목	무역수지	
	2008년 1/4분기	2009년 1/4분기
식품류	-41	-36
원자재	-97	-59
에너지	-879	-580
화학	195	171
기계 및 자동차	338	204
기타 제조품	-156	-160
기타	7	-17
합계	-632	-477

자료: Eurostat

### ★ EU와 10대 교역국 간 무역 증가율

(단위: %)



주: 2009년 1/4분기(전년동기 대비) EU와 무역량이 많은 국가별  
자료: Eurostat

또한 10대 교역국 중 미국(57억 유로 흑자), 스위스(32억 유로 흑자), 터키(3억 유로 흑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對中 무역역조 현상이 심각하여 2009년에도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인 370억 유로의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에 EU 전체 무역수지 적자가 477억 유로인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의 약 78%가 對中 무역수지 적자인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EU의 對한국 무역역조 현상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4분기 27개 회원국 전체의 對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28억 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5억 유로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EU 회원국들은 한국에 50억 유로 규모를 수출하고, 한국으로부터 78억 유로 규모를 수입했다.

이 기간의 각국별 무역수지 규모를 살펴보면, 독일이 274억 유로 규모로 가장 큰 흑자를 달성했으며, 네덜란드(92억 유로), 아일랜드(89억 유로)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영국은 234

억 유로 규모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고, 프랑스(159억 유로), 스페인(135억 유로), 이탈리아(44억 유로) 등 EU의 주요국들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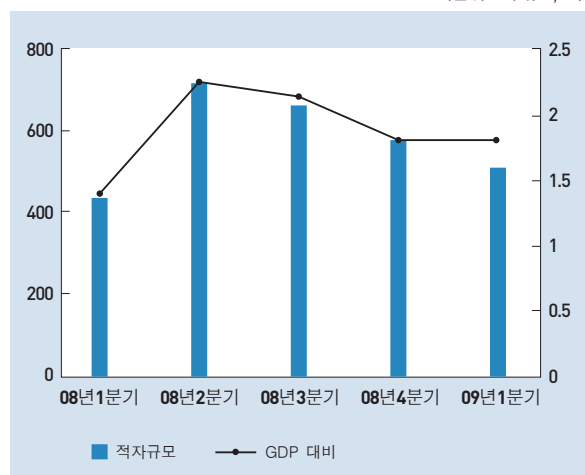
## 2009년 1/4분기

### 경상수지 508억 유로 규모의 적자 기록

2009년 1/4분기 EU의 경상수지 적자는 508억 유로(GDP 대비 1.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4분기 732억 유로(GDP 대비 2.3%)를 정점으로 분기별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세를 보였으며, 서비스 분야는 153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8년 같은 기간의 462억 유로(GDP 대비 1.5%)보다는 더 확대된 규모이다.

### ★ EU의 분기별 경상수지 적자 추이

(단위: 억 유로, %)



주: 2009년 1/4분기(전년동기 대비) EU와 무역량이 많은 국가별  
자료: Eurostat

2009년 EU 및 유로존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각각 1.9%, 1.2%로 2008년 1.5%, 0.7%에 비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별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27개국 중 9개 국가에서 GDP 대비 경

상수지 적자 비율이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9개 국가 중에는 최근 금융위기를 겪은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 4개국이 포함되었으며 불가리아(-18.8%), 키프로스(-13.5%), 그리스(-11.5%)는 두 자릿수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반면 독일(3.6%), 네덜란드(5.7%), 스웨덴(7.0%) 등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자면, EU의 1/4분기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했으나 절대규모는 감소세를 보였다. 2009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수출이 늘어사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인해 전체 교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 감소 추세가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물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늘 긍정적인 변영의 상징이고, 적자는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가 투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투자가 저축보다 큰 규모로 일어난 경우) 발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EU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지속이 우려된다. 더구나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민간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신규 산업주문 지표도 개선되고 있지 않아 단시일 내에 투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2009년 총투자는 1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 각국의 재정적자 누적도 큰 부담이다. 재정적자의 증가는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메워야 하지만 이는 경상수지 적자를 더욱 증가시킨다. 만약 이도 여의치 않아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를 더욱 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쌍둥이 적자(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내수를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sup>1</sup> Eurostat (2009. 6. 17.). "Euro Area External Trade Surplus 2.7 bn Euro". Newsrelease.





★ EU 27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단위 : %)

지역분류	EU	2007	2008	2009	2010
유로 16개국	오스트리아	3.3	3.3	2.7	2.4
	벨기에	2.4	-1.7	-2	-2.2
	핀란드	4	2.2	1.4	1
	프랑스	-2.8	-3.8	-4.3	-4.6
	독일	7.6	6.6	3.6	3.4
	아일랜드	-5.4	-4.6	-1.8	-0.4
	이탈리아	-1.8	-3	-2.6	-2.7
	룩셈부르크	9.8	6.4	6.1	5.6
	네덜란드	9.8	6.8	5.7	5
	포르투갈	-9.7	-11.9	-9.8	-9.5
	스페인	-10.1	-9.5	-6.9	-6.3
	그리스	-14	-12.7	-11.5	-11.9
	슬로베니아	-4	-6.1	-4.6	-4.4
	키프로스	-11.7	-18.2	-13.9	-13.5
	몰타	-6.1	-7.4	-7.6	-7.8
	슬로바키아	-5.1	-6.8	-7.5	-7.1
동유럽	불가리아	-22.5	-24.8	-18.8	-17.2
	체코	-1.5	-3.1	-3.2	-3.3
	에스토니아	-18.3	-9.1	-1.1	-3.1
	헝가리	-6.2	-8.4	-5	-4.8
	라트비아	-22.5	-13.6	-1.5	-1.9
	리투아니아	-15.1	-12.2	-1.9	0.7
	폴란드	-5.1	-5.3	-4.7	-3.7
	루마니아	-13.5	-12.3	-7.4	-6.1
북유럽	덴마크	0.7	2	0.4	-0.6
	스웨덴	9	6.2	7	7.4
영국	영국	-2.9	-1.5	-2.8	-2.8

자료: Eurostat

## 對中 무역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와 같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EU의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각국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도 우려된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는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으로 2009년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가 약 1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WTO는 전 세계 24개국과 EU에서 지난 3개월간 시행한 무역 규제 조치가 83건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에 시행된 무역자유화 조치 건수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역수지 · 경상수지 적자의 총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對中 무역수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 역조 현상으로 인한 마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EU와 중국

의 무역분쟁은 EU의 對中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이래 계속되고 있다. 현재 EU는 신발에서 철강제품에 이르는 중국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도 EU 집행위는 중국의 공업용 원자재 수출 제한에 대해 미국과 공동으로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EU 기업들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공업용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중국 측이 보크사이트, 코크스, 아연, 망간 등에 대하여 수출물량 제한을 실시하고 있어 유럽 철강, 알루미늄, 화학 기업들이 이들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EU와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당시 원자재 수출세와 기타 부과금을 폐

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제한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EU를 비롯한 미국의 철강 노동자들과 제조업체들은 對中 강경대응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 한-EU FTA 조기 타결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 대응할 필요

EU 내에서 보호무역주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최근 분석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가장 우려되는 그룹으로 BRICs와 함께 EU가 꼽히기도 했다.<sup>2</sup> 이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EU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현재 한-EU FTA는 관세환급 문제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한국과의 FTA를 반대해온 자동차 강국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차기 EU 의장국인 스웨덴이 자유무역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으며, 최근 정상회담에서도 FTA의 조기 타결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한-EU FTA의 타결로 EU 내 보호무역주의 확산 흐름에 대비하고 한국과 EU 양측의 자유무역기조를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up>2</sup> 정호성 외 (2009),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CEO Information 제694호), 삼성경제연구소.







# 은행산업 :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구조조정 가능성

## 경기침체 여파로 은행부실이 확대

건전한 은행 시스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근간이다. 전통적으로 EU 경제는 미국보다 은행대출과 예금에 더 의존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EU의 가계금융자산 중 34%는 현금 및 은행예금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sup> 은행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또한 매우 높다. 2007년 중반까지 EU 은행들은 전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한 유럽 상장사들의 총 시가총액에서 24%를 차지하고 있던 반면, 미국의 은행들은 단지 16%만을 차지하고 있었다(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3월 말 현재 각각 12%와 8%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은행 시스템이야말로 유럽 경제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유럽 은행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신용경색의 장기화로 이어져 경제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직접금융(자본시장과 증권화 금융)이 발달된 미국과 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라는 이유만으로 간접금융(은행)에 의존하는 유로존보다 위기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

과연 유럽 은행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IMF는 유로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은행들의 손실이 미국 은행들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2</sup> 2007~2008년 말까지 이미 심각 처리된 은행 자산규모를 보면, 미국이 5,100억 달러로 유로존(1,540억 달러)과 영국(1,100억 달러)보다 많

았다. 하지만 2009~2010년의 상각규모는 미국(5,500억 달러)과 영국(2,000억 달러)보다 유로존(7,500억 달러)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유럽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5,69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유로존의 은행들은 엄청난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중앙은행이 민간은행들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으나, 위기가 진정되기 시작한 3월 이후에도 은행부도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유럽의 상당수 대형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거나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시장압력도 선제적인 정책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예금보장 및 유동성 공급이 실물경제 침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은행 구조조정 압력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유럽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 은행들의 단기 부실여신비율(bps)은 미국 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기가 악화되면서 유럽 은행들의 부실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 은행들의 부실여신비율은 2004년 42에서 2008년 78, 2009년 1/4분기에는 102로 상승하였다. 또한 유럽 은행들은 미국 은행들에 비해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이 높아 유동성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sup>3</sup>

##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9월 말까지 실시

시장에서는 유럽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처럼 유럽도 은행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부하면 이는 유럽 은행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유럽발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럽이 투명하고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면서 IMF와 함께 유럽을 압박하였고, 지난 6월 12~13일 이탈리아 레체(Lecce)에서 열린 G8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다 엄격히 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2일에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는 EU 27개 회원국이 은행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9월 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은 대상, 주제, 목적 등에서 미국과 사뭇 다르다. 개별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각 회원국에 있기 때문에 유럽은행감독위원회의

공통 시나리오와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한다. 따라서 향후 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도 개별 회원국의 권한 사항이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발표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유럽은 은행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테스트의 주된 목적인 반면, 미국은 개별 은행들의 자본 확충 필요액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 부실은행의 자본 확충 압력 고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유럽 은행들의 부실 확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간접금융이 발달되어 있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연계성이 미국보다 강하다. 기업의 은행대출 의존도는 유럽이 80%인 반면, 미국은 20%에 불과하다.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대출 부문의 위험 노출(exposure)이 43%인 유럽 은행과 달리 미국 은행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 증가에 따른 가계 상환능력 약화 및 기업 파산 증가 등으로 유럽 은행들의 민간대출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sup>4</sup> 또한 동유럽 금융불안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도 유럽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발틱 3국 등 동유럽의 위기로 유럽 은행들의 대규모 투자 손실이 우려된다.

다만, 유럽을 대표하는 대형 은행들(Large and Complex Banking Groups; LCBGs)은 재무 건전성

<sup>4</sup>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 불안을 심화시키는 일명 '악순환 고리(negative feedback loop)'가 작동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중앙은행(ECB)은 2010년까지 유로존 은행들이 총 2,140억 유로의 누적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up>5</sup> EU 국가들은 우선주 혹은 기타 하이브리드상품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에 나섰으며, 일부 국가는 자본 확충을 위해 보통주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의 최근 자료(Financial Stability Review, 2009.6)에 따르면, 2008년 10월 이래 유로존 국가들은 1,132억 유로의 은행자본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EU 전체로는 1,560억 유로의 은행 자본이 확충되었다.

<sup>1</sup> 특히 유로존의 비율은 37.5%로 영국(27%)보다 훨씬 높다.

<sup>2</sup> IMF, (2009),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sup>3</sup> 2008년 기준으로 바클레이즈 62배, 도이치뱅크 71배, BNP 파리바 39배, 골드만삭스 15배, BOA 13배 등이다.





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테스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들 은행은 그동안 정부의 자본 확충이 많이 이루어져<sup>5</sup> 대규모 추가 자본 확충은 필요 없을 전망이다. 일부에서 실시된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대형 은행들의 재무 상태는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8일 미국 투자은행인 KBW(Keefe, Bruyette & Woods)가 10개 유럽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도 BNP 파리바 등 프랑스 4개 은행은 자본 확충이 필요 없는 반면, 코메르츠뱅크 등 6개 은행은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향후 은행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듯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자본 확충이 비교적 용이한 대형 은행들과는 달리 상당수 중소형 은행들은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유럽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발틱 3국의 금융위기에 맞물린 북유럽 은행, 자국 경제의 붕괴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와 스페인 은행, 독일과 영국의 비상장 저축은행들이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서유럽 대형 금융그룹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동유럽의 중소형 은행들 역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와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한 유럽 은행들은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유럽 은행들은 해외 대출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지만, 유럽 은행산업은 앞으로가 고비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자산 정리와 구조조정을 신속히 단행할 수 있느냐가 유럽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회복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엔지니어링 산업 : 녹색산업에서 활로를 모색

#### 엔지니어링 산업은 경기침체로 고전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발전기 및 부품(35.5%), 가스터빈 엔진(35%), 풍력터빈(14.6%) 등 에너지 및 환경, 산업용 중전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 중전기시장은 2004~2008년에 연평균 4.1% 성장했으나 2008년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1.4%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2013년까지 연평균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지역별 매출을 보면, 유럽은 전 세계 중전기 시장의 24.2%를 차지하여 미국(35.1%), 아시아태평양(34.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08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요 업체들을 살펴보면, GE가 점유율 32.7%로 1위에 올라 있으며, ABB(점유율 21.9%), 지멘스(20.4%), 미쓰비시 중공업(11.7%), 필립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세계적으로 녹색뉴딜을 위해 4,500억 달러를 투자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전 중인 세계 주요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2009년부터 2년간 총 4,460억 달러의 재정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이 중 저탄소 친환경 성장을 위한 녹색뉴딜(Green New Deal)<sup>6</sup> 규모는 전체 경기부양 재정지출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70% 가량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2,010억 달러)과 미국(1,170억 달러)에 비하면, EU의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지출 규모는 250억 달러로 적은 편이나, 전체 재정지출 대비 비중에서는 한국(81%)에 이어 2위(64%)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

면,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는 건물(15%), 전력망(21%), 철도(29%) 등에 집중되고, 나머지는 수자원 개발(19%) 및 재생에너지 개발(8%) 등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 국가들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탄소분리 저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인 반면, 중국은 철도 및 전력망 개선 등에, 미국은 건물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렇듯 녹색뉴딜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건물보수 확대와 환경, 에너지 분야의 구식장비 및 시설 교체, 신규 인프라 건설수요 증대 등으로 엄청난 시장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Economist는 주요국들의 녹색성장 관련 재정지출 규모가 매년 5.4%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기술개발과 시장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지멘스는 녹색제품 분야에서 활로를 모색

유럽 최대의 엔지니어링그룹인 독일의 지멘스(Siemens)는 GE 등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금년 2/4분기에 신규 수주량이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멘스는 선제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녹색제품을 중심으로 한 한발 빠른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에 힘입어 이익 감소로 고전하는 경쟁사들과는 달리 2/4분기 들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5%, 순이익이 146% 증가하는 등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지멘스는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TAP(Transparency, Accountability, Performance)'라는 전사적인 경영혁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멘스

<sup>6</sup> 2008년 10월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환경 인프라 건설, 에너지 및 환경 시스템 개선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 때 'lobal Green New Deal'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 ★ 주요 업체들의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추이

	단위	2008				2009
		1/4	2/4	3/4	4/4	1/4
지멘스	억 유로[%]	181[2]	192[13]	217[9]	196[8]	190[5]
필립스	억 유로[%]	60[1]	65[7]	63[-2]	76[-9]	51[-15]
ABB	억 달러[%]	80[20]	90[27]	88[22]	91[15]	72[-9]
GE	억 달러[%]	422[8]	469[11]	472[11]	462[-5]	384[-9]

주 : 매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각사 재무제표

는 불황극복을 위해 2010년까지 12억 유로의 경비를 줄이는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멘스는 유통채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전 세계 37만 개에 이르는 하청업체 수를 20% 줄이는 한편 신흥국으로 부터의 부품 구매비율을 20%에서 2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지멘스그룹이 GE와 필립스 등 경쟁사들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산업용 설비부문에서는 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지만 녹색제품(Green Product) 분야에서는 경쟁사를 압도하는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멘스는 녹색제품(Environmental Portfolio)으로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 기차 및 고속철도, 가스터빈, 풍력발전설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멘스는 대체 에너지 산업에 승부를 걸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주도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해 기후온난화 방지도 일조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녹색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멘스가 24.6%인 반면 필립스는 22.6%, GE는 15%에 불과하다. 또한 2008년 사업연도에 지멘스의 녹색제품 매출액은 190억 유로로, 경쟁사인 GE(130억 유로)와 필립스(60억 유로)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는 2007년 사업연도의 매출액(170억 유로)과 비교해볼 때 1년 사이에 11% 증가한 셈이다.

지멘스그룹은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을 2011년까지 250억 유로로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멘스 그룹은 低원가전략(Low-cost strategy)을 내세워 1천억 유로 규모에 이르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신흥시장(특히 중국과 인도)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지멘

스는 2009년 3월에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에 뛰어들어 총 7억 5천만 유로 규모의 고속철도 100량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지멘스는 북미의 풍력 발전시장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지멘스는 북미지역에서 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제3위 풍력에너지 생산업체다. 이 분야는 현재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와 미국의 GE가 각각 1,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멘스그룹은 2005년에 풍력발전 사업에 뛰어든 후발업체이지만 풍력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지멘스 그룹은 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미국 내 인력을 1,000명으로 증원하는 등 전체 인력을 5,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필립스도 EcoVision 전략을 지속 추진

유럽을 대표하는 가전메이커였던 필립스도 대대적인 사업전환을 통해 의료, 민간소비재, 조명기기 등 녹색제품을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필립스는 2005년부터 추진해온 환경전략인 EcoVisionⅢ에 이어 2007년부터 EcoVisionⅣ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6년 15%에 불과하던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을 2012년에 30%까지 끌어올리고, 녹색산업 관련 투자도 10억 유로(누적 기준)로 증액시킬 예정이다.

2008년 녹색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6%로 2007년에 비해 2.8%p 상승하였다. 분야별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을 보면, 의료기기 23%, 민간소비재 13%, 조명기기 53%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필립스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효과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2012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지속적으로 줄여 2007년 대비 에너지효율을 25% 향상시키고, 탄소배출량을 25% 감소시킬 방침이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리스본 전략 완료 이후의 유럽

## 2000년 3월 발표된 리스본 전략

2000년 3월 23~24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EU이사회에서 EU 정상들은 21세기 유럽이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토의한 후, 유럽을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리스본 전략’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취업률 70% 달성(여성 취업률 60%), R&D 투자를 GDP 3%로 확대, EU 역내 서비스 시장 통합 추진, 역내 시장통합을 위한 국내 입법 화율 98.5% 달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고용·의료·사회보장 혜택 제공, 정규교육(고등학교 졸업) 중도 포기 청소년(18~24세)의 비율을 10% 이하로 감축, 절대빈곤층을 10% 이하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전략은 일자리 창출, 경제개혁, 사회통합 등을 지향하는 광범위한 유럽 사회개혁안이다. 그런데 이 야심찬 계획은 2004년 11월 네덜란드 전 총리 빔 콕(Wim Kok)을 대표로 하는 위원회가 작성한 리스본 전략 중간평가보고서가 발표된 후 대폭 축소·조정되었다. 개혁 추진이 매우 부진하여서 2010년까지 당초의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 리스본 전략의 수정

2005년 3월 22~23일 EU이사회에 모인 EU 정상들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점을 둔 리스본 전략 수정안을 발표했다. 일명 新리스본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 수정안은 복지보다 성장에 초점을 둔 것으로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경제론자인 바로소(José Manuel Barroso) 신임 EU집행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 1월 취임한 바로소 위원장은 ‘성장 없는 복지는 오

래가지 못한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인 성장 우선정책을 주장해왔다.

新리스본 전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초기의 리스본 전략과 구분된다. 회원국과 공통체 간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회원국별 행동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담당관(Ms or Mr. Lisbon)을 임명하며, 회원국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 보고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적인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투자 및 고용 지역으로서 EU의 매력 증대, 성장을 위한 지식과 혁신, 양질의 고용 창출이라는 새로운 3대 목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연구와 교육, 혁신을 묶어 이른바 ‘지식삼각형(knowledge triangle)’이라 지칭하면서, 유럽에 지식기반 경제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며, 리스본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이 세 영역의 경쟁력 강화와 유기적 결합,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다.

## 리스본 전략과 EIT 설립

2005년 2월 바로소 EU집행위원장은 리스본 전략 실천을 위해 지식삼각형이 효과적으로 동원되려면 미국의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처럼 유럽에도 기업과 학교,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대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가칭 EIT(European Institute of Technology) 설립을 제안했다.

EIT 설립 계획은 EU집행위원회의 이름으로 2006년 2월 22일 EU이사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었고, 2007년 6월 EU경쟁력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에서 연구소 설립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연구소 설립 정신을 EIT의 이름에 드러나게 하자는 산업·연구·예







너지위원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EIT 공식명칭이 유럽혁신기술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로 확정되었다. 2007년 11월 23일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EIT 설립과 운영을 위해 2008~2013년 EIT 예산 3억 870만 유로를 EU 차기 다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통과시켰고, 2008년 9월 15일부터 EIT가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유럽 각지의 EIT 활동을 총괄하는 사무국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다.

### EIT 조직

초기에 EU 집행위원회가 구상한 EIT는 미국의 MIT처럼 단일 캠퍼스를 갖춘 모습이었다. 그러나 EU집행위원회 자체 자문위원회인 유럽연구자문위원회(European Research Advisory Board)가 단일 캠퍼스를 통한 EIT의 하향식 운영을 우려하여 이를 정면 거부하면서 단일 캠퍼스 건립 계획은 무산되었다. 대신 EU 역내 각지의 우수기관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무국만 설치하여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형태를 취했다. 네트워크는 크게 기후변화, 재생가능에너지, 차세대 ICT기술이라는 세 그룹으로 조직되었다. 개별 대학, 연구소, 기업들은 지식·혁신커뮤니티(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y, KIC)에 가입신청을 하여 선발되거나 협력업체로 등록함으로써 네트워크에 포함된다.

EIT의 핵심조직은 최고의결기관에 해당하는 이사진(Governing Board)과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KIC이다. 이사진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공개 선발 과정을 거쳐 지난 2008년 7월에 18명의 이사가 임명되었고, 마틴 슈만(Martin Schuurmans) 박사가 초대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반면 KIC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EIT 설립 규정에 따르면 이사진 임명 후 18개월 이내에 KIC 구성원이 결정되어야 한다. 2009년 말 KIC 구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IT는 당분간 기후변화, 재생가능 에너지, 차세대 ICT기술 분야를 특화하여 이 세 분야의 교육과 연구, 혁신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EIT는 하나의 유럽형

우수대학의 본보기가 되어, 상아탑 속에서 순수과학 연구에 몰두하던 유럽 상당수의 대학들이 기업과 협력하여 곧 실용 가능한 지식을 생산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최근 유럽 대학들은 앞다투어 산학협력에 나서고 있다. 유럽 경제지표를 보아도 2008년 가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직전의 유럽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했고, 리스본 전략 실시 이래로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 리스본 전략의 실적이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 리스본 전략 시행 이후  
EU 27개국의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변화 (단위: %)

구분	EU2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	2.0	1.2	1.3	2.5	2	3.1	2.9
고용률	62.6	62.4	62.6	63	63.6	64.5	65.4

주: 고용비율은 EU 27개국의 취업자/15~64세 인구  
자료: Eurostat

### EIT 설립 의의

EIT 설립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EIT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거웠다. 미국과 다른 대학문화를 가진 유럽에 미국식 대학 모델을 이식했다는 거부감과 MIT와 달리 강력한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산만하고 비효율적으로 흐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또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연구기관들을 주제별 네트워크로 결합했다고 해서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얼굴을 맞대고 공동 작업하는 MIT와 같은 성과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현재까지도 EIT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한다.

EIT가 MIT와 같은 성과를 나타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상아탑 속에 갇힌 채 오랫동안 사회적 요구에 둔감했던 유럽 대학들이 EIT 설립 이후 적극적으로 지식기반 경제체제가 요구하는 지식생산자로 변화하여 리스본 전략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EIT의 설립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

### 포스트 리스본 논의 시작

리스본 전략에서 개혁 완성의 해로 설정한 2010년을 앞두고 최근 EU는 리스본 전략 이후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2009년 가을에 인터넷을 통해 유럽과 각국의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고, EU집행위원회는 2009년 말 혹은 2010년 초에 포스트 리스본에 대한 공식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열리는 EU 이사회에서 포스트 리스본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현재 EU 내부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포스트 리스본의 방향이 ‘성장과 고용’ 중심의 정책 탈피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2008년 3월 EU 회원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인구고령화, 사회적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고용’ 중심의 리스본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 바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유럽의 ‘성장과 고용’ 우선 정책에 변화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만약 포스트 리스본에서 성장과 고용 우선 정책이 수정된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주제로는 ‘녹색성장’이 가장 유력하다. ‘지구환경문제’나 ‘지속가능한 성장’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고, 세계 각지에서 정책의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2008년 EU이사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된 주제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2010년 이후 유럽은 더 한층 까다롭게 환경기준을 적용하면서 유럽 시장을 넘보는 외국 기업들을 곤란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녹색성장과 관련된 연구 인력과 친환경 제품 생산업체에는 호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정은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연구교수





# 국경 없는 콘텐츠, 국경 없는 시청각 산업

## ‘Contents without Frontiers’:

### 유럽 미디어 산업 규제환경의 변화

EU집행위원회는 2009년 5월 ‘창의력 측정 가능성’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sup>1</sup> 최근 EU의 창의력과 혁신에 관한 이와 같은 강조는 급격한 기술발전 과정을 거듭하는 창작산업, 특히 미디어 산업과 이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창구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매체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경계가 불분명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으로 인해 기존의 방송과 통신을 넘어 인터넷 TV, 모바일방송, 전자신문 등으로 매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진 데 반해, 수용자는 ‘콘텐츠’라는 이름의 다양한 상품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이 과거에는 방송과 통신이라는 전송 플랫폼을 기준으로 규제를 해왔던 반면, 최근에는 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즉 콘텐츠를 규제하는 새로운 틀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콘텐츠는 다양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체 간 융합과 디지털화 및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미디어 기업들을 시장경쟁에 노출시킨다. 이는 미디어 기업이 공정성과 균형 등의 공공 목적 수행보다는 기업의 자본축적을 위한 상업적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게 만든다. 따라서 융합화와 미디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미디어 분야별 규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미디어 산업을 규제하던 규제기구의 개편이 요구된다

## EU 새 미디어 법안

EU에 의해 새롭게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이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sup>2</sup> 이는 1989년과 1997년의 TVWF(Television without Frontiers) 지침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07년에 발효되어 2009년 12월까지 모든 회원국에서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EU 미디어 법 개정의 주요 배경은 앞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기술발전과 미디어 융합 등의 환경변화 및 신규 서비스 등장으로 볼 수 있다.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는 각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위한 안정적인 게임규칙을 요구하게 했다. 특히 모바일 개인매체를 이용한 콘텐츠의 접근이 점차 증가하면서 규칙의 실행주체와 규제 수준 및 정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서비스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새 법안은 그 적용범위와 개념이 기존 TVWF 지침에 비해 대폭 확장되었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은 시간대별로 편성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기존의 TV, 라디오, 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와 같은 선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청자 스스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주문형 TV(On-demand TV)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법안은 TV,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통신과 주문형 비디오(VOD), IPTV 등을 포함한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기준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규제가 완화되게 했다. 특히 주문형 방송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

여 가벼운 규정을 적용했다. 즉, 새로운 매체영역으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는 보다 유연하게 간소화한 측면을 보인다.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문화 및 미디어 다양성 보호, 둘째, 광고규제 완화, 셋째, 규제협력, 마지막으로 미디어 상품의 원산지 원칙<sup>3</sup> 강화를 들 수 있다.

우선 문화의 다양성과 미디어의 다양성은 각 회원국 방송사뿐만 아니라 주문형 TV 사업자들도 유럽 작품, 특히 독립 시청각 제작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할당제(Quota)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각 회원국 내 미디어 지침 시행 규제기구의 독립성 확보도 요구된다. 나아가 개정 법안은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미디어 활성화 정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TV프로그램에 자사 제품을 노출시키는 ‘PPL 광고’를 뉴스, 다큐멘터리와 아동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EU는 미국과 달리 PPL을 공식적으로 금지해왔다. 하루 3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온 TV광고 시간 한도도 폐지되었다. 또한 영화와 아동물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최소 20분에 한 번씩 중간광고를 허용하던 기존 법규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소비자, 아동 및 인간존엄성 보호 원칙 등은 기존 지침이 유지되었으며,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에 기반하여 ‘행동수칙’을 제정하면서

유해 음식물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 등을 추가했다. 미디어 규제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와 더불어 EU와 회원국의 공동규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디어 상품의 원산지 원칙은 방송 프로그램이 송출되는 국가의 규제 원칙 준수를 내용으로 한다.

## 변화 중인 회원국 미디어법

영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을 통해 매체별로 나뉘어 있던 법을 단일화하고,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sup>4</sup> 같은 통합 규제기구를 창설했는데, 이는 EU 지침(Directive)을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지난 6월 16일 Ofcom은 급격히 발전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Digital Britain’이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창작 콘텐츠 제작 및 배급 증진을 위한 공공재원과 광역 서비스 접근권 확보 및 저작권 관련 내용을 다룬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감독 기구를 창설하는 대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 콘텐츠 소유주가 새로운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들의 조율이 실패할 경우 Ofcom이 개입해 중재를 맡는다. Digital Britain은 ISP가 파일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초기 경고와 명단 공개를 통해 불법 다운로드를 70%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up>3</sup> 원산지 원칙(Country of origin principle)은 TV 방송이 송출되는 국가에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를 총괄한다는 원칙으로, 1989년 TVWF 지침에 이미 명시되었던 것이 2007년 개정 법안에서 융합매체서비스까지 확대되었다.

<sup>4</sup>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으로 일원화되기 이전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규제와 감독은 Broadcasting Standard Commission,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Radio Authority, Radio Communications Agency의 5개 기관에서 시행되었다.

<sup>5</sup> OJ L 323 (2005. 12. 9.). 2005/865/CE: Recommendation on Film heritage and the competitiveness of related industrial activities. <<http://ec.europa.eu/avpolicy/reg/cinema>>

<sup>6</sup>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www.csa.fr](http://www.csa.fr)>

<sup>1</sup> Europa (2009. 5. 28.). Creativity can be measured? Press Release.

<sup>2</sup> Europa (2007. 11. 29.). Commission welcomes start of a new era for Europe's audiovisual media, Press Release. OJ L032 (2007. 2. 6.).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 2007/65/EC. COM/2009/0185 final.







★ 영국과 프랑스의 방송통신 규제기구 및 주요 특징

유형	국가	구분	관련분야			매체 간 겸영 규제	주요 특징
			정책 수립 · 집행	경제 및 기술규제	프로그램/콘텐츠 규제		
단일규제 시스템	영국	방송	OfCOM	OfCOM	자율/콘텐츠 사업자	-유료채널: 겸영 허용 -지상파: 제한적 겸영 허용 <sup>7</sup>	2009년 6월 Digital Britain 발의, 다매체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법 제시
		통신			자율		
복합규제	프랑스	방송	MCC(문화매체부)	CSA(시청각위원회)	CSA	-유료채널: 겸영 허용 -지상파: 제한적 겸영 허용 <sup>8</sup>	사르코지 대통령의 미디어 개혁 주도로 2009년 2월 공영방송법 개정과 과감한 규제 완화 추진
		통신	MEFI(재정경제산업부)	ART(통신규제위원회)	자율		

자료: 영국 BIS와 DCMS에서 2009년 6월 발표한 Digital Britain Final Report와 KBI(2005) KISDI(2009) 참조

고 온라인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특정 이용자의 URL을 차단하는 기술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저작권 소유주가 불명확한 시청각 작품에 대한 복제와 소유를 허가함으로써 영국의 영화 유산(Film heritage) 보존을 위한 영국 영화위원회(BFI)에 크게 기여한 측면도 있다. 이는 2005년 EU의 영화유산 보존을 위한 권고<sup>5</sup>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영국과 달리 복합규제 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1989년 커뮤니케이션법 개정을 통해 창설된 시청각위원회(CSA)<sup>6</sup>가 방송의 경제적, 기술적 분야와 프로그램 분야 규제를 담당하고, 통신영역은 재정경제산업부(MEFI)와 통신규제위원회(ART)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는 단일규제 시스템이 통신 분야와 같은 기술적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와 콘텐츠 분야까지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009년 2월 프랑스에서 통과된 공영방송법 역시 방송 콘텐츠 프로그램 및 가치 등 내용적 측면에서는 과거를 계승하되 공영방송 구조나 자원, 운영체계 등 형식적 측면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혁을 추구하는 이원 구조를 보여준다. 공영방송법은 상업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을 확립하기 위해 광고비율의 점진적인 축소

와 수신료나 국고 등 공적기금에 의한 안정적인 공영방송 재원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정부는 공영방송 사장 임면권을 갖는다. 또한 콘텐츠 생산에 대한 투자와 유통망을 현대화하고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체 간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고주현 연세-SERI EU센터 Post-Doc. 연구원

## 중국의 對유럽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

Chinese Direct Investment in Europe: Facts and Fallacies  
Chatham House, June 2009

영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는 ‘중국의 對유럽 직접투자: 사실과 오류’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對유럽 FDI(해외직접투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 잉여국가인 중국의 FDI 규모는 198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7년 중국의 FDI는 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중국은 연간 기준으로 상위 15위의 해외투자국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대적 규모면에서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UNCTAD가 산출한 ‘FDI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sup>1</sup>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투자는 경제 및 GDP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며, 중국 FDI의 대부분(80%)은 홍콩과 기타 조세피난처(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 제도)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는 아시아태평양지역(10.5%) 및 아프리카와 미국지역(각각 3.8%)이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對유럽 투자(3.8%)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사실상 중국은 경제규모와 성장력에 비해 아직까지 해외지역으로 투자영역을 넓힐 여력이나 기술적인 노하우, 경쟁우위를 누릴 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해외 FDI에 대한 정부정책 또한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정부는 점진적 개방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가 전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SOEs)에 대한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중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이 유럽지역에 투자하는 이유는 첫째는 시장추구(Market-

seeking), 둘째는 전략적 자산추구(Strategic-asset-seeking)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유럽지역에서 제조업(45%)보다는 서비스업(55%)에 대한 투자를 더 활발히 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기술 및 자동차 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중국기업들은 유럽지역에 진출하기에 앞서 유럽 기업과 합작투자(Joint Venture)의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이는 중국기업이 현존하는 유럽 기업의 브랜드, 유통망, 기술 노하우 및 고객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설투자(Greenfield Investment)는 이미 자국시장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한 중국기업이 영역확장을 모색하거나 제품을 유럽 시장의 고객 취향에 맞게 현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 예로 대표적인 중국기업인 Huawei는 프랑스에, Shenyang은 독일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한편 본 보고서는 유럽지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의 영향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중국기업은 사업을 무분별하고 공격적으로 해외로 확장하기 이전에 자국시장을 먼저 사로잡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럽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중국기업은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sup>7</sup>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인 신문의 지상파 지분 일부 제한

<sup>8</sup> 동일 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신문, 라디오, TV 동시 소유 금지

<sup>1</sup> 해외 FDI 수행지표는 세계 FDI 중 특정국가의 해외 FDI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세계 GDP 중 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계산한 지표이다.





# 유럽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European Employment  
and Skills in the Short to Medium-Term: Company Case Studies  
GHK, May 2009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GHK는 ‘기후변화가 유럽의 단·중기 고용 및 기술에 미치는 영향: 기업사례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유럽 기업들은 기후변화 및 관련 정책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15개 기업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기업분석은 기후변화와 관련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의 선두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후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내·외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응방안과 변화된 기업경영의 추진 방향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분석대상 15개 기업들은 대부분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고객, 투자자, 주주와의 관계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장에서 자신들의 선두위치를 유지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EU ETS<sup>2</sup>와 재생 법안(Renewables Directive)이 더욱 확대되고 강력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의 한 사례인 물 부족으로 인해 생산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물을 사용하는 기업(Coca Cola, Cadbury)이나 수력발전을 이용하는 에너지 기업(Statkraft, Enel)들은 자신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 원료 및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 판매·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

히 기업들은 환경 전문가를 고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경영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있다. 세계적인 시멘트 기업인 Holcim은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정책입안자와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지속경영을 위해 6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Statkraft는 풍력발전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50명으로 구성된 테스트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Marks and Spencer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20~30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한편 내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컨설턴트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인력에 비해 아직은 적은 규모이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보다 기존의 직원을 재교육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이탈리아의 ANCC-COOP는 ‘COOP School’이라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유럽의 각 분야에서 선두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정책 및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중요성과 대응방안, 그리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유로존의 주택자산은 개인소비에 상당한 영향

Euro Area Private Consumption: Is there a Role for Housing Wealth Effect?  
ECB, May 2009

유럽중앙은행(ECB)은 ‘주택자산(Housing Wealth)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유로존의 개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1980~2006년 기간의 전체 유로존의 데이터와 1995~2006년 기간의 개별 유로존 국가들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산의 변수들이 유로존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자산효과)가 뚜렷하며,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0~2007년 사이에 유로존의 주택가격은 50% 가까이 상승하였다. 반면 주택가격의 연간 상승률은 2005년 8%대에서 2007년 4%대로 감소하였다. 명목 주택자산(Nominal Housing Wealth)은 1994년 2%대에서 2000년 10%로 상승하였으며, 그 후 2007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금융자산(Financial Wealth)과 주택자산을 구별하여 부(富)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는 많이 나왔다. 보고서들은 소비의 생애주기 항상 소득 가설(Life Tim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of Wealth on Consumption)에 따라 부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데이터 확보가 용이한 미국과 영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유럽 개별 국가의 부와 소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유로존 전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흔치 않다.

연구결과 전체 유로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한 금융자산의 한계소비성향(MPC)은 1유로당 2.4~3.6센트이다. 두 데이터세트에 의한 명목주택자산의 한계소비성향은 0.7~0.9센트 사이다. 만약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배제한다면 실질주택자산의 한계소비성향은 1유

로당 2.5센트가 산출된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10년이 안 되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패널 예측과 신뢰도가 낮은 수준의 주택자산 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두 변수의 결과를 해석해 장기간의 예측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앞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상속과 구입 등 유로존 차원에서 각 국가들에 대한 미시적 데이터가 집계된다면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sup>2</sup> EU ETS(Emission Trading Scheme)는 유럽에서 2005년에 시작된 것으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각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



## 국회 「브뤼셀포럼」 발족

지난 6월 30일 제1회 국회 「브뤼셀포럼」 발족식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회 「브뤼셀포럼」은 EU집행위원회가 재정지원하고 연세-SERI EU센터가 주관하는 전문가 포럼으로서 정계, 재계, 학계, 공공기관 등을 망라한 유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다. 동 모임은 유럽의회 등 EU의 정치인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국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뤼셀포럼」은 연세-SERI EU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향후 4년간 매년 짝수 달에 여섯 번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한·구주의원외교협 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그리고 고상두 교수(연세-SERI EU센터 소장)와 김득갑 실장(연세-SERI EU센터 부소장) 외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EU 학생 방문 프로그램 후기

평소 학교 수업과 언론 보도를 통해 유럽 통합의 과거와 현재를 접했던 학생들에게 연세-SERI EU센터에서 주최한 'EU 학생 방문 프로그램'은 유럽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31명의 인솔 교수와 학생들은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The College of Europe, 루뱅대학,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등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학생들은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유럽인들의 꿈과 이상이 27개 회원국에서 조화롭게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경험이 장차 동북아시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행될 통합의 과정에 소중히 쓰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주벨기에·주EU 한국대사관에서 한-EU FTA를 비롯해 EU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활약을 엿볼 수 있었다. 브뤼셀을 떠나며 학생들은 이번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